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09호 (2021-14)
발행일 2021. 9. 27.
ISSN 2092-7117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김성아

복지국가연구단 부연구위원

-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봄으로써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양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의 불평등 상황을 지표로 확인함.
- 분석 결과,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함.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를 완화하는 등 소득보장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불평등 지표가 악화하여 팬데믹의 영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함. 즉,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 영향을 받아 시장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재난 취약집단이 존재함.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이 불평등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음.
- 또 다른 불평등으로서 자산 불평등은 거주주택, 부동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총자산의 모든 자산 형태에서 소득 불평등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남.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 특히 주택자산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함.

01. 들어가며

- ◆ 2021년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이 세계 10위권에 들었고(IMF, 2021)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음(외교부, 2021).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이제는 성장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 분배의 불평등으로 관심을 확장할 때임.

- 현대사회에서 불평등은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저성장을 유발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Stiglitz, 2012). 또한 자본과 자산에 유착된 불평등은 세대를 이어 상속되고 결국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저해함(Piketty, 2013).
- ◆ 이런 맥락에서 2021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지향함(기획재정부, 2021. 7. 15).
- 이 글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훑아봄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 이를 위해 다음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의 불평등 상황을 지표로 확인함. 자료에 따라 불평등 지표 수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불평등 현황은 자료원을 고려하여 추세에 주목해야 함.
-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0년대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지표로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활용함. 이 지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원자료로 함.
-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 현상을 지표로 확인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분기) 원자료를 분석함. 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부터의 불평등 추세를 확인함.
- 또 다른 불평등으로서 자산 불평등의 실태를 지표로 확인하기 위해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함. 이 자료의 기준 시점은 2019년임.

02. 용어와 지표 정의

- ◆ 이 글에서는 소득 불평등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득을 정의하고, 불평등과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소개함. 그리고 또 다른 불평등으로서 자산 불평등의 현황을 다루기 위해 자산을 정의함.
- ◆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감한 소득임.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등 시장의 1차 분배 결과를 반영함.
-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임.
 -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조세 부담의 공적이전지출을 감한 것으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임.

〈표 1〉소득 정의

구분	내용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경상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처분가능소득 =						

자료: 저자 작성.

- 소득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상대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임.
 - 소득 점유율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해당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상위 10%인 10분위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10%인 1분위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누어 10분위 배율을 측정함.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인 10분위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인 1분위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임.
 - 팔마 비율(Palma ratio)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임.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130여 개 국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5~9분위의 소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비해 상위 10분위와 하위 1~4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한 Palma(2011)에 근거를 두고 있음. 즉, 소득 변화가 비교적 강건한 중간층 이외에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비교하여 양극화 실태를 반영함.
 - 지니계수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여 전체 인구의 누적 비율을 소득의 누적 비율로 나눈 값임.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
-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기준 불평등의 차이는 재정지원을 통한 공적이전 효과로 정의할 수 있음.
 -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의 차이는 조세 정책을 포함한 최종 소득재분배 효과로 정의할 수 있음.
 -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을 포함한 소득재분배 기제의 시장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함.

$$\begin{aligned}
 \text{공적이전 효과} &= (\text{시장소득 불평등} - \text{경상소득 불평등}) / \text{시장소득 불평등} \times 100 \\
 \text{소득재분배 효과} &= \text{공적이전 효과} + \text{조세 정책 효과} \\
 &= (\text{시장소득 불평등} - \text{처분가능소득 불평등}) / \text{시장소득 불평등} \times 100
 \end{aligned}$$

◆ 소득 불평등에 이어 자산 불평등 현황을 지표로 확인함. 여기에서 주목하는 자산은 속성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정의함.

-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을 합한 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정의함. 부동산자산에 기타 실물자산을 합한 금액을 실물자산으로 칭함.
-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총자산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부채를 감한 자산을 순자산으로 정의함.

<표 2> 자산 정의

구분	내용					
부동산자산 =	거주주택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			
실물자산 =				+ 기타 실물자산	+ 금융자산	
총자산 =						
순자산 =						- 부채

자료: 저자 작성.

03. 지표로 보는 소득 불평등 추세

◆ 여기에서는 팬데믹 이전인 2010년대의 소득 불평등 추세를 다양한 지표로 확인함.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원 비중의 추세와 분위별 소득 점유율을 우선 확인하고, 상대 빈곤율을 통해 저소득층 현황을 파악한 후, 10분위 배율과 팔마 비율로 소득 불평등 추세를 확인함. 그리고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시함.

◆ 지표를 통해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훑아보기에 앞서 불평등 지표를 잘 이해하기 위해 2010년대에 각 소득원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확인함<표 3>. 소득원 비중을 산출하는 기준은 경상소득임.

- 2011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 근로소득 비중이 63.7%에서 67.7%로 약간 증가하였음.
 - 상대적으로 사업소득 비중은 2011년 27.2%에서 2019년 20.3%로 감소했음.
-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1년 4.0%에서 2019년에는 6.9%에 이름.
 - 조세 부담, 즉 공적이전지출의 비중도 2011년 10.4%에서 2019년 12.7%로 약간씩 증가하여,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제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 2011~2019년 소득원 비중 추세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장소득									
근로소득	63.7	65.8	67.0	67.2	67.3	67.2	67.3	68.7	67.7
사업소득	27.2	25.9	24.9	24.6	23.2	23.2	22.8	21.1	20.3
재산소득	6.9	7.0	6.3	6.2	6.6	6.3	6.5	6.5	6.9
사적이전소득	1.4	1.2	1.1	1.0	1.0	1.2	1.3	1.5	1.5
사적이전지출	3.3	3.7	3.4	3.5	3.3	3.2	3.4	3.6	3.3
경상소득									
공적이전소득	4.0	3.8	4.1	4.5	5.1	5.4	5.5	5.9	6.9
처분가능소득									
공적이전지출	10.4	10.4	10.2	10.3	11.3	11.7	12.2	12.6	12.7

주: 경상소득 대비 비율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임.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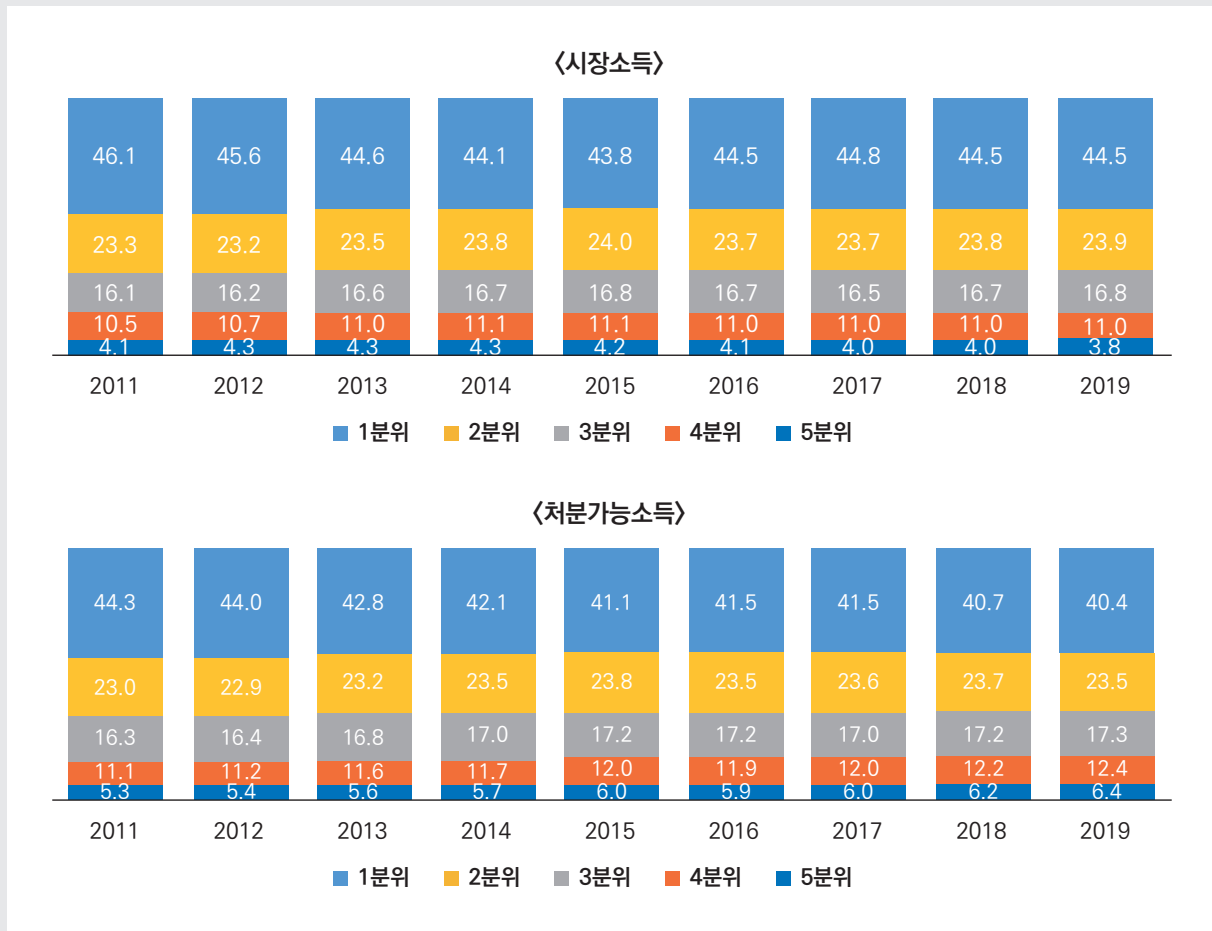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에서 2021. 6. 13. 인출 자료에서 평균 소득을 확보하여 소득원 비율을 저자가 계산.

◆ [그림 1]의 2010년대 분위별 소득 점유율 추세를 보면, 5분위의 점유율이 전체의 40% 이상으로 가장 높음. 즉, 중위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상당한 소득이 집중되어 있음.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의 점유율은 2011년 4.1%에서 2019년 3.8%로 약간 감소하였음.

-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위별 가구소득 점유율을 보면, 2011년에 비해 2019년에 5분위의 점유율이 4%포인트 정도 감소하였고 낮은 분위, 특히 1분위의 점유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 즉, 공적이전을 통해 시장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일부 완화하고 있음.
- 공적이전의 재분배 기능은 최근 10년간 강화되고 있는데, 처분가능소득 기준 1~4분위의 점유율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대적으로 5분위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음.

[그림 1] 2011~2019년 분위별 가구소득 점유율

(단위: %)



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임.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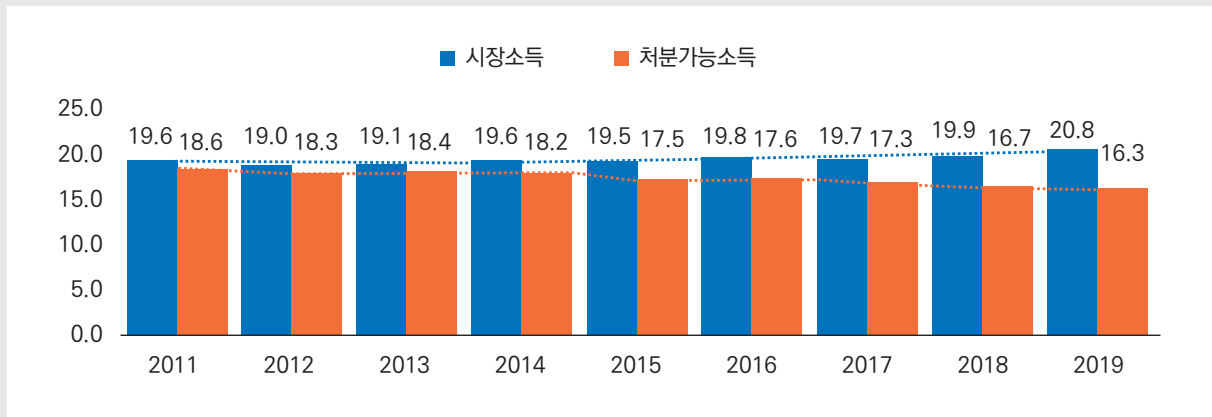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에서 2021. 6. 13. 인출.

◆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그림 2].

-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를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을 비교한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2011년 5.1%에서 2019년 21.6%로 16.5%포인트 증가하였음.

[그림 2] 2011~2019년 상대 빈곤율 추세

(단위: %)



주: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가구원의 비율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임.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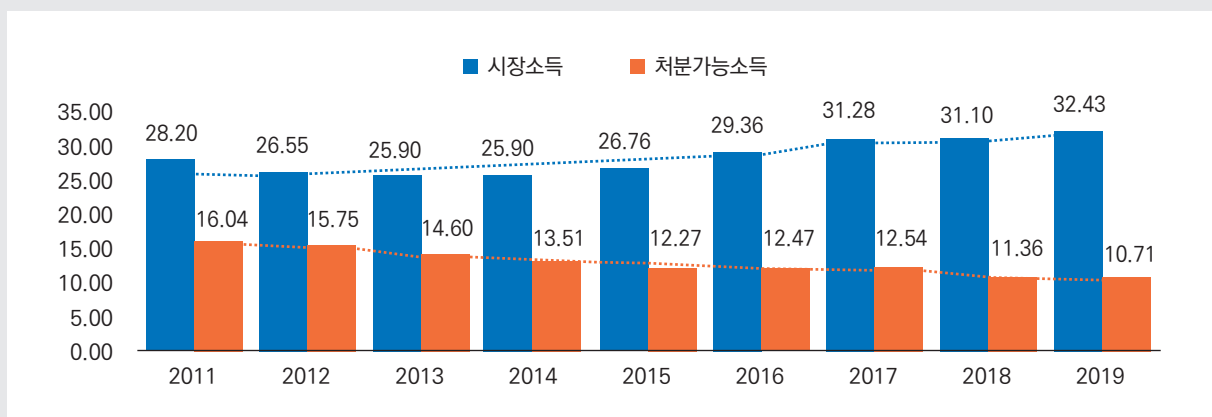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에서 2021. 6. 13. 인출.

◆ 2010년대 10분위 배율은 2011년 시장소득 기준 28.2배에서 2019년 32.43배로 악화하였음.

- 처분가능소득 기준 10분위 배율은 2011년 16.04배에서 점차 감소해 2019년 10.71배로 나타남. 소득재분배 효과는 2011년 43.1%에서 2019년 67.0%로 23.9%포인트 증가하였음.

[그림 3] 2011~2019년 10분위 배율 추세

(단위: 배)



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임.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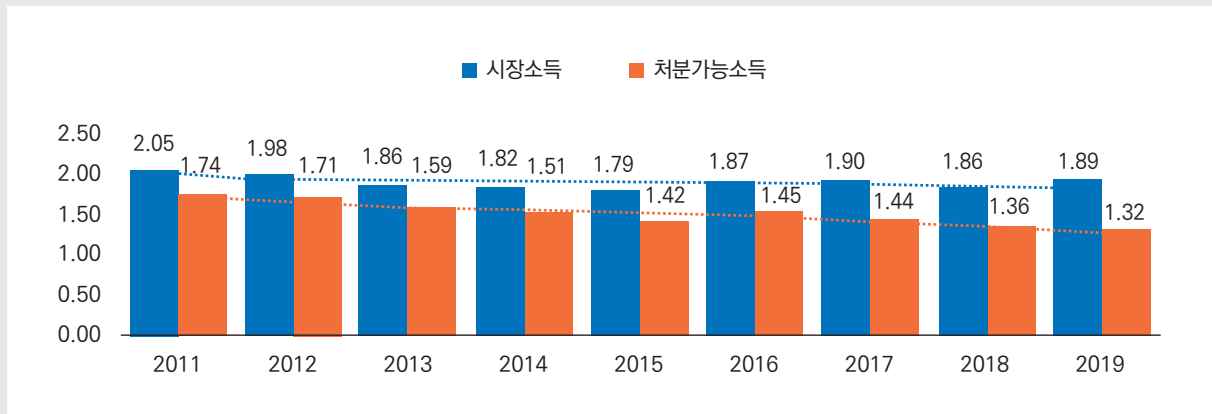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에서 2021. 6. 13. 인출.

◆ 2010년대 팔마 비율은 2011년 시장소득 기준 2.05배에서 2015년 1.79배로 완화된 이후 2019년 1.89배로 다시 악화되었음.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팔마 비율은 완화 추세를 보여 2011년 1.74배에서 2019년 1.32배로 감소하였음.

- 팔마 비율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2011년 15.1%에서 2019년 30.2%로 15.1%포인트 증가함.

[그림 4] 2011~2019년 팔마 비율 추세

(단위: 배)



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임.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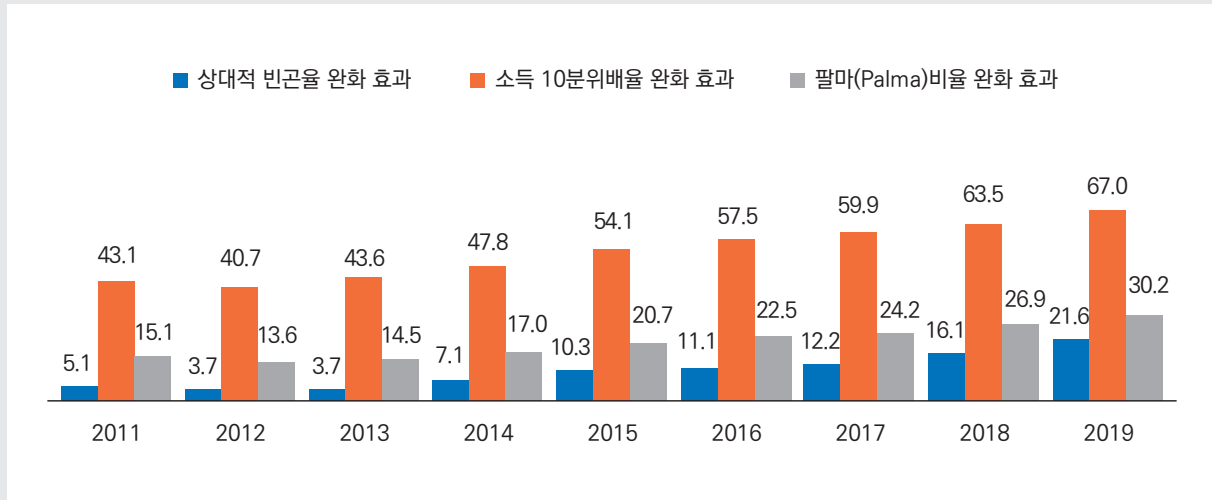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에서 2021. 6. 13. 인출.

◆ [그림 5]는 상대 빈곤율과 불평등 지표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식화한 것임.

- 상대 빈곤율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2011년 5.1%에서 2012~2013년에 3.7%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7.1%로 증가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21.6%에 이름.

[그림 5] 2011~2019년 빈곤 및 불평등 지표별 소득재분배 효과

(단위: %)



주: 상대 빈곤은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임.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소득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 및 불평등 지표값과 시장소득 기준 지표값의 차이를 시장소득 기준 지표값으로 나눈 비율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활용해 재정지원 효과는 저자 계산.

자료: 통계청 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에서 2021. 6. 1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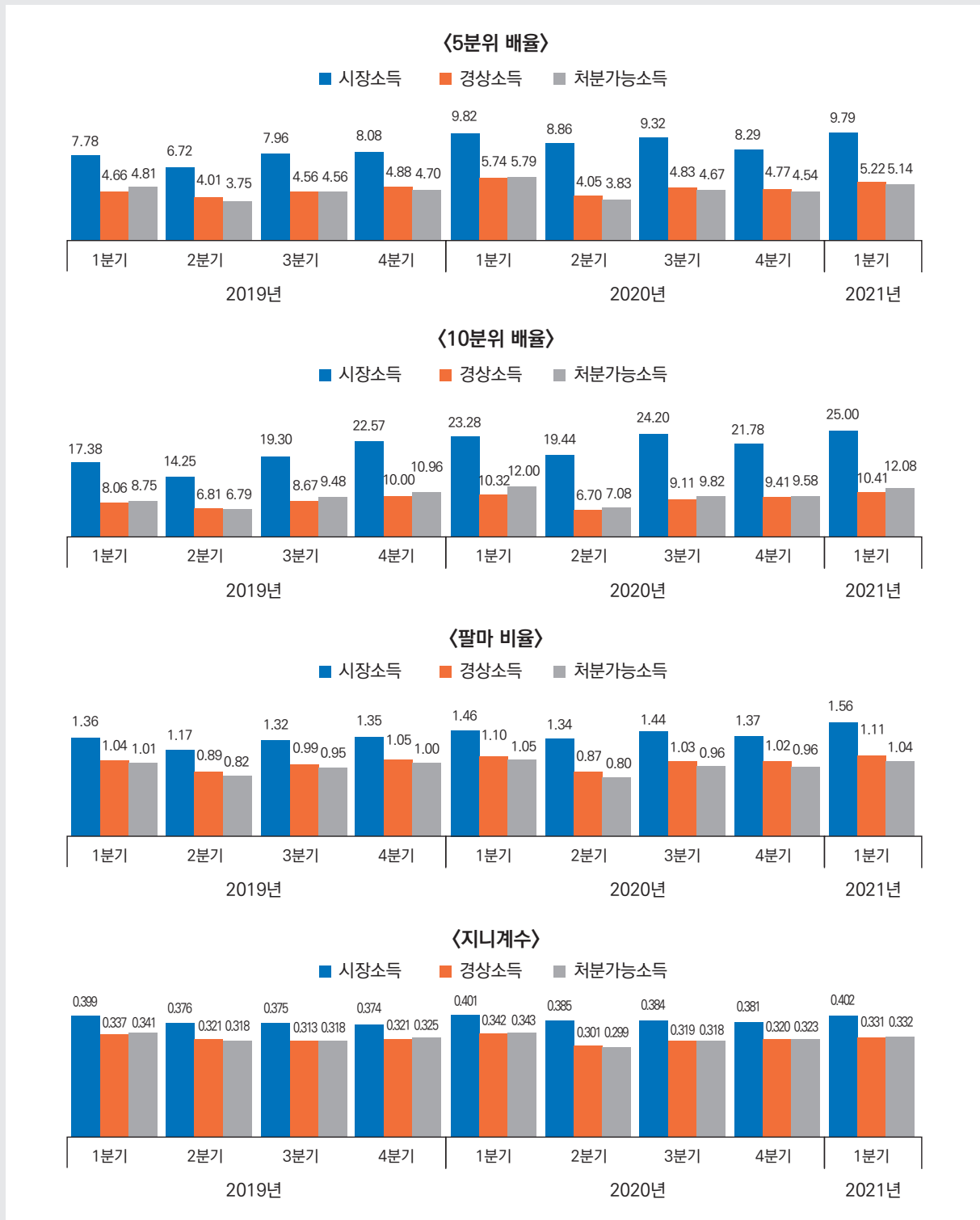
- 소득 10분위 배율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 뚜렷하여 2011년 43.1%에서 2012년에 40.7%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3년 43.6%로 2011년 수준을 회복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 67.0%에 이릅니다.
- 2010년대의 불평등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추세는 팔마 비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2011년 팔마 비율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15.1%였고 2012년 13.6%로 약간 감소함. 2013년에 14.5%로 다시 증가한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19년에 30.2%로 늘어남.
- ◆ 불평등을 지표로 보았을 때,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즉 노동시장에서의 1차 소득분배는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보다 유지되거나(팔마 비율) 악화됨(상대 빈곤율, 10분위 배율).
-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은 다양한 지표에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소득보장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04. 코로나19 확산과 소득 불평등

- ◆ 2019년 12월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3월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도시를 봉쇄 조치(lock down)하였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었음.
 - 여유진 외(2021)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 임금근로자는 단축근로, 휴직, 실직을, 자영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한 실태를 확인하였음. 사람들의 물리적인 접촉과 이동이 제한되면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자영자나 특수고용근로자 등 노동계층의 소득이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의 상흔이 팬데믹 이후에 남지 않도록 감염증의 이질적인 영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임. 이런 맥락에서 여기에서는 지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불평등 현상을 진단하고, 공적이전 및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함.
- ◆ [그림 6]과 같이 5분위 배율로 확인한 결과, 2019년 동기에 비해 2020년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악화되었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82배로 전년 동기 7.78배에 비해 약 26.2% 정도 증가하였음. 같은 해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고, 3분기에는 17.1% 증가하였음. 반면, 4분기의 증가율은 2.6%로 대폭 낮아지고, 2021년 1분기에는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적이전이 포함된 경상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20년 1분기 5.74배로 전년 동기 4.66배에 비해 약 23.2% 정도 증가하였지만, 2분기에는 전년 동기 4.01배와 유사한 4.05배 수준을 유지함. 3분기에는 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지만, 4분기와 2021년 1분기에는 각각 2.2%, 9.0% 감소하였음.
 - 2020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총 5차례의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구와 개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음. 2020년 2분기부터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배율과 팔마 비율, 지니계수 등 불평등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된 경향과 다르게 경상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표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즉,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이 고려된 경상소득과 조세 부담까지 고려된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은 2020년에 2019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재정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 2019~2021년 분기별 불평등 지표

(단위: 배)



주: 개인 단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소득임.

자료: 통계청. 2019~2021년 가계동향조사(분기) 원자료 저자 분석.

◆ <표 4>는 불평등 지표에 대한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 주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1분기 공적이전의 5분위 배율 기준 불평등 완화 효과는 41.5%로 2019년 1분기 40.1%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하였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2020년 2분기 공적이전의 5분위 배율 기준 불평등 완화 효과는 54.3%로 전년 동기 40.4%에 비해 13.9%포인트 대폭 증가하였음.
 - 이후 공적이전의 5분위 배율 기준 불평등 완화 효과는 2020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4분기에 2.8%포인트, 2021년 1분기에는 5.1%포인트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분기에 공적이전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크고 3분기 이후에도 전년 동기 대비 효과가 큰 추세는 10분위 배율과 팔마 비율, 지니계수의 불평등 지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남.
 - 불평등 완화 효과는 노동시장의 여건과 변화를 직접 반영하는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의 대응성을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불평등 완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당시 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재정지원, 특히 공적이전 지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 2019~2021년 분기별 불평등 지표 완화 효과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5분위 배율〉									
공적이전 효과	40.1	40.4	42.7	39.7	41.5	54.3	48.2	42.5	46.6
소득재분배 효과	38.2	44.2	42.6	41.9	41.1	56.7	49.9	45.2	47.5
〈10분위 배율〉									
공적이전 효과	53.6	52.3	55.1	55.7	55.7	65.5	62.4	56.8	58.4
소득재분배 효과	49.6	52.4	50.9	51.4	48.5	63.6	59.4	56.0	51.7
〈팔마 비율〉									
공적이전 효과	23.9	24.6	24.7	22.3	24.1	35.3	28.7	25.3	29.3
소득재분배 효과	25.7	29.9	28.3	26.2	27.8	40.4	33.3	29.6	33.8
〈지니계수〉									
공적이전 효과	15.6	14.5	16.6	14.3	14.6	21.8	17.1	16.0	17.6
소득재분배 효과	14.5	15.4	15.2	13.0	14.4	22.2	17.1	15.4	17.3

주: 개인 단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소득임. 공적이전 효과는 경상소득 기준 지표와 시장소득 기준 지표의 차이를 시장소득 기준 지표로 나눈 비율임. 소득재분배 효과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표와 시장소득 기준 지표의 차이를 시장소득 기준 지표로 나눈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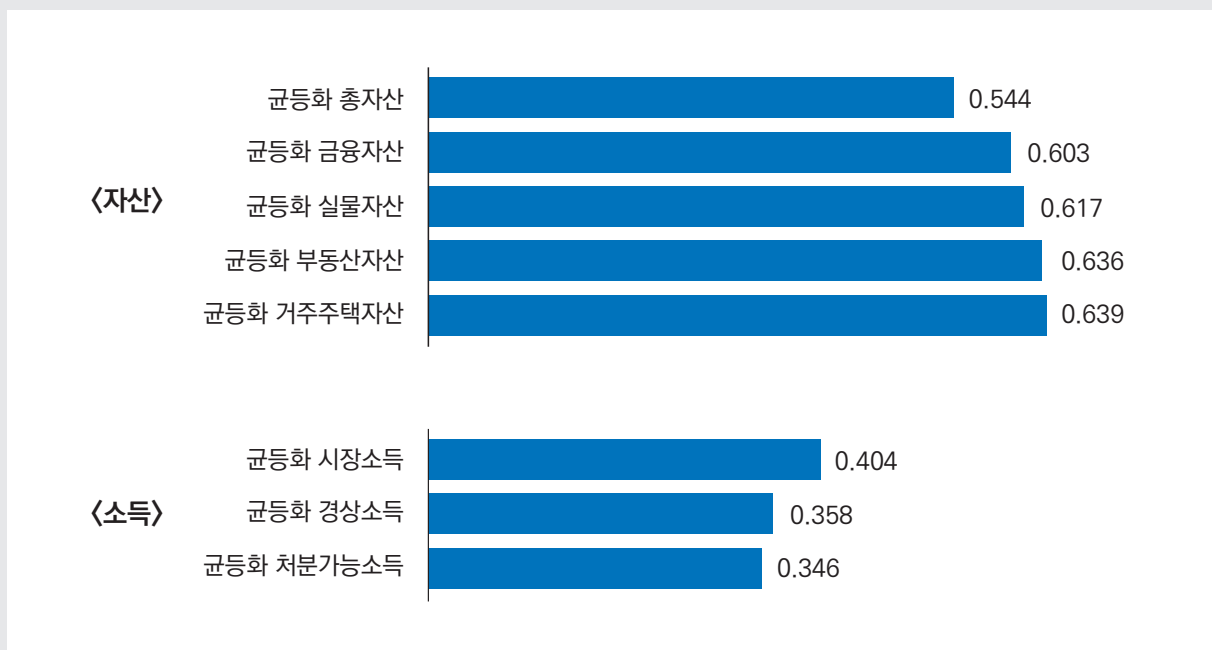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2021년 가계동향조사(분기) 원자료 저자 분석.

05. 또 다른 불평등, 자산

◆ [그림 7]은 지니계수로 확인한 최근 자산 불평등 수준임. 비교를 위해 소득 지니계수를 제시함.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4, 경상소득은 0.358, 처분가능소득은 0.346임.

- 총자산, 즉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합산 기준 지니계수는 0.544로 경상소득 기준 지니계수에 비해 52.1% 높음.
- 금융자산의 지니계수는 0.603으로 소득 기준 지니계수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높음.
- 실물자산의 지니계수는 0.617로 소득 기준 지니계수뿐 아니라 금융자산 지니계수에 비해서도 불평등 수준이 높음.
 - 실물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지니계수는 0.636으로 실물자산 지니계수에 비해 높음.
 - 부동산자산 중 거주주택자산의 지니계수는 0.639로 부동산자산 지니계수에 비해 높음.
- 여기에서 검토한 모든 자산 유형의 불평등 수준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높음.
 - 특히 부동산, 그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자산의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7] 2019년 자산 및 소득 지니계수



주: 개인 단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자산, 부채, 소득임.

자료: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2019년 기준) 원자료 저자 분석.

06. 나가며

- ◆ 이 글에서는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석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분석 결과,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함.
 -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를 완화해 소득보장 정책을 통한 재분배 기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불평등 지표가 악화하여 팬데믹의 영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함. 즉,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 영향을 받아 시장소득이 감소하는 재난 취약집단이 존재함.
 - 공적이전의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이 경상소득 기준 불평등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음.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음.
 - 공적이전의 불평등 완화 효과와 조세 정책을 포함한 최종 소득재분배 기제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비교할 때, 전자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또 다른 불평등으로써 여기에서 검토한 자산 불평등은 거주주택, 부동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총자산의 모든 자산 형태에서 소득 불평등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이외 자산, 특히 주택자산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함.
- ◆ 사회적 위험의 영향이 이질적이고 1차 분배에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공적 지원은 더 취약한 집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빈틈을 메우는 공정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소득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자산 등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취약계층과 고소득·고자산가 등 집단의 이질성을 정책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난 10년 동안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이 악화함에 따라 무엇보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1차 분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소득 요소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함.
 - 노동시장의 1차 분배에서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을 적극적인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을 통해 완화해 왔음. 특히 감염병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난이 불평등을 심화하였고 이에 대응한 소득재분배의 상당 부분을 공적이전을 통해 실현했다는 점에서 조세 정책의 불평등 완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저성장을 유발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산 등에 유착된 불평등이 결국 실제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공적 소득재분배 기제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요구됨.

〈참고문헌〉

국내문헌

기획재정부. (2021. 7. 15.). 정부 합동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김을식, ..., 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교부. (2021. 7. 4.).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보도참고자료. 외교부.

국외문헌

Palma, J. G. (2011). Homogeneous Middles vs. Heterogeneous Tails, and the End of the 'Inverted-U': It's All About the Share of the Rich. Development and change, 42(1), 87-153. doi:https://doi.org/10.1111/j.1467-7660.2011.01694.x

Piketty, T. (2014).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역). 파주: 글항아리. (원서출판 2013).

Stiglitz, J. E. (2013). 불평등의 대가 (이순희 역). 파주: 열린책들. (원서출판 2012).

인터넷 자료

통계청 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에서 2021. 6. 13. 인출.

IMF. (2021. 4.).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에서> GDP, current prices(Billions of U.S. dollars)를 2021. 7. 15. 검색.

데이터베이스

통계청. 2019~2021년 가계동향조사(분기) 원자료.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2019년 기준) 원자료.